

월례토론회 지상중계

# 한반도 정세와 97년 통일운동의 과제

교육실

## 97년 제4차 월례토론회

일시 : 1997년 7월 22일 19:00 ~ 22:00

장소 : 병원노련 회의실

발표자 : 강장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과) 대북시정정책과 민족통일의 전망

지정토론 : 노중선 (통일문제 자료실 대표) 북핵동포들과 통일운동의 전망

참석자 : 30명(노조간부, 단체활동가, 학생)

## 주제발표 / 대북 식량정책과 민족통일의 전망

강정구 교수 / 동국대 사회학과



날은 6.25 전쟁이후 최대의 민족재앙으로 일컬어지는 북한 식량난에 대해 남한 정부의 대북 식량정책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런 식량정책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한반도 정책과 결합되어 우리의 민족통일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의 전망에 대해 보고자 합니다.

### 1. 북한의 식량부족 현황

북한 식량난의 현황에 대한 평가는 남한 정부, 관개기관, 또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97년에 들어서면서 대체로 그 규모나 심각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인구가 2,200만입니다. 북한 주민의 연간 소요량은 1인당 0.3톤을(80년대 남한 소요량인 1일 825그램 기준) 기준으로 할 때 약 6백60만 톤이 되고, 기타 가축의 사료 등으로 1백만 톤을 계상한다면 7백60만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생산능력은 80년대까지 5~6백만톤 수준으로 150만톤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부족분은 자연적 조

건이 열악한 북한의 사정을 감안하면 자급률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에서 후호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만성적인 식량부족에도 불구하고 식량난을 겪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90년 들어 식량생산이 4-5백만톤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93, 94년의 냉해 등의 자연재해, 95, 96년 큰물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3백만톤 수준으로 격감하였고, 97년 현시점에서 가뭄피해도 극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교역 등의 봉쇄로 북한이 받은 충격은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90년부터 올해까지 경제는 8년동안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비료나 농기구의 생산이 안되고 에너지난이 가중되는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제 식량위기와 상존하게 된 것입니다.

### 북한의 기근 심황

이러한 만성적 식량 부족에다 자연재해를 연속적으로 맞은 결과 97년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북한주민에게 하루에 밥한공기 정도에 불과한 100-150gr 정도의 식량

을 지급해 주고 있는 기근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기근은 아프리카 등의 기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기근에 심각하게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몇 십만톤 정도의 지원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하루 소요량 700-800그램이 배급되다가, 식량사정이 악화되면서 점차 줄어 150그램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북한공기 수준입니다. 빈부 격차가 작아 북한 주민 전체가 지속적인 식량부족으로 서서히 기력이 쇠잔하게 되어 앞으로 2-3개월 내에 긴급한 대량의 식량지원이 없을 경우 일부 소수에 한정된 아사가 아닌 집단적, 대규모 아사라는 참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근상황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등과는 달리 약탈이나 부정부 상태가 없이 놀랄 정도로 관료조직에 의한 질서유지 체계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과 어린이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비타민 결핍으로 인해 야맹증 등에 걸려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통계로 잡히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먹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량난에서 오래 살기 힘들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더 연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노인들이 스스로 굶고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상황이 많이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 국제지원 상황

그런데 식량난의 외부지원현황을 보면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는 97년 4월2일 대북 식량 지원으로 9천5백50만 달러를 긴급 모금하기로 했으나 5월 중순 현재 3천6백5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에 6월초까지 9천5백불 지원 요청했으나 4천7백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 경우 대북정책이 94년 핵위기에 서 연착륙정책으로 바뀌었음에도 상징적 차원에 머물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는 지원이더라도 의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미국보다 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량지원이 저조한 요인은 남한의 대북 식량정책과 대북 봉쇄정책, 북한의 조기봉피를 가정한 흡수통일정책 때문입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중국이 연간 50만톤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고, 세계식량계획(WFP), 세계기독교협의회(WCC) 등 국제기구나 NGO 등의 인도적 차원의 구제 활동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 민간기구 등은 범국민적 차원의 북한통포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과 국제사회의 대정부 압박 때문에 남한 정부는 마지못해 6백만달러 등 제반치러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대책방안

단기적으로 요구되는 2백만톤정도의 식량을 지원할 경우 국제 옥수수 가격을 본

당 180달러로 계산한다면 3억6천만달러로 우리 돈으로 3천2백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약 170억달러에 달하는 남한 군사비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이 정도만 지원하더라도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비가 5-9조나 되는데 그중 3-6%만 잡아도 200만톤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역량 밖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지금 당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5천억원에 가까운 남북협력교류기금을 정부는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95년의 GNP가 4천5백17억달러로 세계11위를 차지할 정도로 양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북한의 식량위기를 넘기기 위한 지원은 남한의 경제력으로 보아 결코 무리한 부담이 아닙니다. 설사 커다란 부담이라 하더라도 민족사의 장끼적 구도 하에서 통일기금이란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군사비라는 엄청난 분단비용의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간의 신뢰 회복을 기할 수 있으며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값진 업적을 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진벨재단 스티브 린튼 이사장의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백년 후의 역사는 그들을(북한사람들을) 천재지변을 만나 질서있게 고생한 사람으로, 우리를(남한사람들을)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죽어 가는 동포를 돌지 않는 악당으로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돌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란 소리까지 했습니다... 세계인들은 북한의 기아가 당연히 한국이 해결해야 할 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들은 코리아인이기 때문에 죽어갈 것입니다(『달』, 1997.7:45).”

## 2. 남한의 대북 식량정책 현황

96년 전반기만 하더라도 남한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통일원에서는 50만톤, 안기부는 20만톤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보고 북한이 국제기구에 식량지원을 호소하는 것은 업살이라면서 식량지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한 식량 지원을 하게 되면 군량미로 유용된다는 ‘유용설’로, 96년 1월에는 북한은 나름대로 만능적인 식량난에 대한 적응 능력을 터득하고 있어 당장 체제위기에 봉착할 정도는 아니고 1백20만 톤의 비축미로 충당 가능하다는 ‘적용능력설’로, 또 북한은 식량을 군량미로 쓰면서 식량이 부족하다고 구걸하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이라는 김대통령의 ‘민족배신설’ 등으로 전략적 차원의 쌀 15만톤 지원 외에 정부 차원의 식량지원을 줄곧 외면해 왔습니다.

96년 식량부족의 심각성이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시점에서 나온 것이 식량무기화정책입니다. 이는 4차회담에 북한을 끌어시키는 전략적 수단으로 식량지원을 활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그동안 북한이 잠수함사건에 대해 유례가 없는 공식적인 사과 표명, 황장엽의 망명 인정

등 전향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치 철칙이고 한국외교의 최대목표인양 견지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대북 식량정책 뿌리



남한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조기붕괴 촉진을 통한 흡수통일정책이고, 이는 식량지원 거부와 군비경쟁의 가속화, 대북봉쇄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쪽조르기 → 북한정권붕괴 → 흡수통일이라는 단순 도식을 명신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대북 식량정책의 뿌리를 규명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는 바로 김정권의 통일정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흡수통일을 부정하고 있지만 통일정책의 기본 방향은 북한의 조기붕괴를 통한 일방적 흡수통일정책입니다. 소

련 멸망 이후 여러 가지 위기를 중첩적으로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봉쇄정책을 지속해서 북한정권의 붕괴를 이끌어 내고 흡수통일로 귀결시킨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대북봉쇄정책과 더불어 경제적 위기에 몰린 북한을 마치 막 코너에 내몰려는 듯 남한은 해마다 군사비를 10% 가깝게 증액시켜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정권 출범 이후 군사비는 93년 9.6%, 94년 9.3%, 95년 9.9%, 96년 10.7%, 97년 대통령 특별 지시에 의해 12.7% 늘어났고 98년 예산은 97년보다 1조 9천5백11억이 늘어난 16조3천16억원을 요구해 13.6%의 증액을 꾀하고 있습니다. GNP수준에서 남한의 1/20정도에도 못 미치는 북한이 이러한 군비경쟁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을 악용한 정책인 것입니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조기붕괴 촉진을 통한 흡수통일정책이고, 이는 식량지원 거부와 군비경쟁의 가속화, 대북봉쇄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쪽조르기 → 북한정권

붕괴 → 흡수통일'이라는 단순 도식을 맹신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북한 목조르기 정책의 전망

지금의 김영삼정권의 위치로 보아 기존의 정책을 전환하여 북한 살리기에 전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첫째는 대북식량지원 거절 정책은 바로 북한 조기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이라는 기본정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기본정책을 수정해야만 대북식량정책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록 현정권이 기존의 북한조기붕괴론에 의한 흡수통일정책에서 '북한살리기'로 전향하더라도 과연 현재 김정권의 지도력으로 이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황장익의 망명이나 박정희되살리기 등에서 보듯이 극우 언론이나 일부 정보기관 및 5·6공세력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개혁적 음모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시점에서 이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극복하고 북한 되살리기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차기 정권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북한정권의 붕괴 가능성

북한 목조르기를 계속하고 식량지원을 봉쇄하면 과연 남한정부의 의도대로 북한정권은 붕괴할 것인가?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런 엄청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혼란과 대항세력의 대두, 사회혼란 등의 징조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래서 나름대로 북한 정권이 스스로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정권이 붕괴하려면 상층부의 분열, 즉 엘리트간의 갈등을 보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엘리트들은 혁명 2세대로 거의 대부분 만경대 출신입니다. 부모가 일제에 죽임을 당하거나 고아로 큰 사람들로, 김일성 주석이 정권을 장악한 뒤 민족해방투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자녀들을 데려와 엘리트 학원인 만경대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고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북한에 민족정기가 확립되는데 상당히 공헌한 사람들입니다. 중간 엘리트는 73년 김정일이 주창한 3대 혁명소조에서 함께 키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쉽게 엘리트들이 분열할 것이라는 속단은 어렵습니다.

또한 시민사회가 없고, 조직의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저항운동을 통해 민중봉기가 일어나기도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하였습니다. 단, 식량난 등이 6·7년 이상 계속되면서 외부의 지원 부족과 북한 민중의 삶의 처절함에 의해 민중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둘러싼 엘리트들의 분열가능성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일정권이 붕괴된다 해도 과연 흡수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흡수통일을 이룬다 하더라도 남쪽의 역량으로 통일비용을 감당하고 통일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북한장권의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분단고착화로 귀결될 전망이 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

### 3.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형성과 통일전망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극단적인 대결성격을 띠었던 냉전 양극체제 아래서는 비록 남과 북이 아무리 자주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규장력이 압도했기 때문에 통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통일시대에 와서 외세는 더 이상 고정불변의 상수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비롯된 탈냉전으로 인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 안으로는 6월항쟁 이후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이 결합되는 민족역량의 성장, 1995년 남한의 GNP가 4천5백억달러를 증가하여 세계 11위를 차지하는 경제역량의 증가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이 협력하면, 주변국이 통일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주적인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 통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 미국과 중국간의 신냉전 형성기류

##### 중국 위협론

그러나 최근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듯이 미국과 중국간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동북아에 신냉전 기류가 급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또 다시 분단고착화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

다. 80년대의 미국의 가상 적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 들어 미국의 경제력 회복과 일본의 거품경제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일본경제론은 사라지고 전통적인 미일 유대 정책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90년대의 가상의 적은 이제 일본이 아니라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총량 규모에서 2010년경에는 일본을 능가하고 미국 다음 가는 경제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최대의 인구,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민족주의, 홍콩의 반환,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 등지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화교 등의 요인이 중국위협론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미국은 서서히 중국봉쇄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96년 중국과 대만 사이의 분쟁 시 인디펜던스호 등 항공모함을 파견해 중국을 위협함으로써 '1개의 중국정책'에서 중국과 대만의 분리지배라는 실질적인 '두 개의 중국정책'으로 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홍콩의 반환과 관련하여 홍콩문제 개인의 합법화를 거명한 '홍콩정책법안'을 92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지속적으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트집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듯이 97년 5월 19일 발표된 미국의 '4개년 국방계획보고서'는 2015년까지 미국이 초래권 국가로서 단극세계질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고, 또 중국을 암시하여 2010~15년 사이에 '1개 이상의 지역국가'가 이 기간중 미국의

이익에 군사적으로 도전하려는 야망과 수단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중국위협론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아시아대평양 지역에 10만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임을 언명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과의 신냉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한결 높아지고 있습니다.

#### 중국의 다극화 전략

이러한 대중국 봉쇄정책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로비활동 등을 지속하는 한편,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97년 정상회담에서는 "해계모니와 힘의 정치"에 반대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미·일의 동맹 강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와의 연대를 추구하면서 "냉전후 다극화 체제를 지지하고 단일국가에 의한 세계 지배에 반대한다"라는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초패권적 단극질서(uni-polar)를 지속시키려는 정책에 대응하여 다극적(multi-polar) 세계질서 형성을 공개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일안보협의회에서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국내 문제이며 일본이 미국과 협력해 간섭해서는 안된다"며 항의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일방적 공세에 대한 수세적인 방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2010년 정도가 되면, 중국도 이런 미국의 공세에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

을 것입니다. 중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미국과 냉전관계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 전략은 역사를 되보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극적인 세계질서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동북아 신냉전질서하의 통일전망은 미소냉전시대의 상황으로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족의 대처 방안은 동북아신냉전이 도래하기 이전에 남과 북이 서로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 민족통일성을 되찾고, 공동성을 확대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여서 통일과정에 조속히 진입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94년 김일성주석 유고이후 조문과등이 아니라 남북의 화해라는 전환적인 계기로 삼았더라면, 또 95년 큰물난리 때 무조건적이고 대대적인 식량지원이 이뤄졌더라면 아마도 오래지 않아 화해협력단계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남북간의 골이 이미 상당히 깊어졌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나마 전향적이고 진폭적인 지원으로 나선다면 지난 기간의 골을 메울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15년 이내에 남북한이 화해협력단계나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하여 부분통일을 이루어서 우리의 통일문제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민족적인 핵심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 4. 주변국 식량지원 정책과 통일전망

##### 주변국의 식량지원 정책



주변국가들의 정책을 보면 전략적 이해 관계 때문이라도 북한에 대규모의 식량지원 제공에서 북한되살리기에 나서는 것이 논리적이든 연착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미국도, 한반도 분할지배를 근본적 이해로 설정하고 있는 일본도, 유일한 북의 진정한 동맹자이고 또 한반도 완충지역 확보에 근본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중국도(물론 중국의 경우가 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는 가장 적극적이긴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북한되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국무부의 정책은 미국의 기본전략 차원에서 연착륙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CIA, 국방부, 군산 복합체는 단기적 이해에 따라 전술적 수준의 봉쇄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식량지원을 못하는 이유는 장단기 전략상의 마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이러한 괴리가 표출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해마다 50만 톤의 식량지원을 약속하였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 수준의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도의 지원으로 북한의 식량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줄 알면서도 대대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93년 3월 NPT를 탈퇴하자 미국이 조성한 한반도핵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곧, 중국은 최후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94년 6월핵위기 시

점까지 그들의 참 의도를 숨긴 채 미국이나 한국에 협력하는 듯한 애매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들의 실리를 취하다가 북한에 대한 전쟁 위협이 거의 현실화되는 듯한 순간에 최후동침을 발휘하는 실책을 노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실리 추구적 외교정책 외에도 바람 끝의 시점에서 대대적인 식량지원을 제공해 북한의 대중국 의존을 심화시키려는 복선을 간 정책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나라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서는 비록 남한의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전략적인 분단고착화정책에 의해 북한 되살리기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까지 북녘 동포들이 겪는 절곡과 재앙, 그리고 남한에 대한 적개심은 민족의 상처와 분열, 갈등을 심화시켜 장기적 분단고착화로 나아가는 저변요소가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북한정권 붕괴 시나리오

##### 흡수동일

북한 식량난의 극단적 상황을 접한 미국 내 일부에서는 대북연착륙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연착륙이 아니라 북한붕괴라는 비상사태에 대비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정권 붕괴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면 남한의 대북봉쇄정책이 실효를 거두어서 흡수동일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도식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북한 정권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은 필연적으로 북한이 내부 식민지화되는 통일입니다. 또한 북한 내부의 문제에도 외풍인 남한과 미국의 대북봉쇄정책이 상당히 작용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공존의 바탕 위에 민족통합을 이루는 통일이 아니라 한 쪽이 다른 쪽을 정복하여 이뤄지는 결과물로서 이런 흡수통일은 민족감정의 장기화와 심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부 식민지화 통일을 북한 주민이 수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식량위기에 처한 동족의 굶주림을 해소시키기는 커녕 이를 조장하고 악화시킨 결과로 몸과 마음이 다함께 황폐해진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흡수되는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정권이 붕괴되었을 경우 북한이 남측에 의해 흡수되는 흡수통일을 택

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 국가로 존속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북한 주민의 자결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한 주도에 의해 북한주민의



내부식민지화 통일은 북한주민이 수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식량위기에 처한 동족의 굶주림을 해소시키기는 커녕  
이를 조장하고 악화시킨 결과로 몸과 마음이 다함께  
황폐해진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흡수되는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자결권이 짓밟히고 강제로 북한이 합병되는 것은 일종의 침략 행위입니다. 유엔 등 지구촌 공동체에서도 이를 용납하지도 않을거니와 용납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민족행로를 막기 위해

북녘 동포를 민족의 품으로 껴안는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설사 김정일경권이 조기 붕괴한다 하더라도 민족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한다면 외세의 개입은 통제될 수 있고 민족 자주적인 통일행로를 걷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천중정권의 수립

다음은 보다 현실적 수준에서 등장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천중정권의 수립입니다. 이는 완충 지역으로서 북한 존재의 필요성이라는 중국의 근본적 이해관계와 더불어 실제 중국은 북한에 매년 50만톤의 식량지원 및 석유 등을 공급하고 있는 맹방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통적 유대관계, 친중인맥의 형성, 지리적 근접성, 사회주의권의 공동성 등 현실적인 발판을 갖춘 점에서 가능성이 높은 행로입니다. 이 경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게 되어 독자성을 상실하게 되며, 자주적인 통일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고 분단 고착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잠정적, 다국적 신탁통치

다음 중국이나 미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6.25전쟁 당시와 같이 북한을 유엔의 잠정적 신탁통치나 미·중 중심의 다국적 신탁통치하에 두는 행로입니다. 6.25당시 북한을 이승만정권의 통치하에 두기보다는 신탁통치를 실시하겠다는 결정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실제 6.25이후

수복지구였던 속초, 양양, 명주 등에서는 1954년까지 유엔군사령관의 군정 하에 놓여 있었고 형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니다.

남한의 대북봉쇄정책이나 인도주의적 식량지원마저 거절하는 반민족적 행태 등은 지구촌에서 남한 주도의 통일을 수용하지 못하는 충분한 까닭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가능성도 상정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유엔 통치하에 두어 북한사회가 안정을 어느 정도 되찾을 경우 북한 주민의 자결권에 의해 북한의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선택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물론 이제까지의 남한에 의한 대북봉쇄정책과 식량정책의 악몽 때문입니다. 중국식 개혁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가운데 어느 체제를 택한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국가체제로 나아갈 것이고 이는 장기간의 분단고착화로 귀결될 것입니다.

### 미국개입에 의한 남한의 흡수통일

마지막으로 남한이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행로입니다. 이 경우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충돌이라는 엄청난 참화를 다시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러시아와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게 되어 통일시대의 한반도는 1890년대의 조선과 같이 외세의 의해 농락 당하는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남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붕괴 촉진에 의한 흡수통일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분단고착화로 귀결되는 것으로 그 실현성도 없거나 당위적인 차원에서든 수용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우선 북한동포살리기 차원에서 긴급지원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장기적 차원에서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여 구조개선을 통한 장기적 식량 확보의 길을 터놓아야 합니다. 이제 남한의 대북식량정책은 흡수통일의 전략에서 벗어나서 북한의 식량난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남과 북이 이제까지의 적대를 씻어 내고 화해와 협력 및 민족대단결의 길로 접어드는 민족사적인 계기를 만들어 내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발판으로 자주적인 통일 터담기가 진척되어 화해, 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로 부분통일을 이룩한다면 비록 동북아의 신냉전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민족재통일은 필연적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통일시대의 민족사적 과제가 민족 중심적으로 완수되리라는 낙관적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응답 및 토론

**질문** 통일한국의 사회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은 간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형태일 것입니다. 개방개혁은 객관적인 필연의 문제입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미국중심의 자본주

의 체제가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시점, 남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일국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우리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결합된 사회민주주의적인 경제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를 최소화하면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결합시킬 수 있겠는가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정치적 역할을 키우는 것이 통일운동의 장기 전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4자회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평화협정에 대한 4자회담은 1996년 4월 한 미제주회담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기존의 남한의 남북당사자 논리를 대변하는 '2+2 회담'과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자회담은 출발은 4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남과 북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은 보충국으로 남는, 곧 '4-2'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3+1' 회담을 제안했으나 남한과 미국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기존의 북미회담이라는 북한의 제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북미당사자협상안은 남한을 회담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3+1'은 남한을 당사자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한반도에서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을 회담의 주체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양 측면이 있습니다. 4자회담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미군이 남한에 4만 명이나 주둔하고 있고 또 이들이 엄청난 무력 소지자인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코 한반도에 엄연히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도 없거니와 민족사적으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4자회담은 '4+2'로 될 것이 아니라 '3+1'이거나 '3+2' 곧, 미국이 협정 주체이면 서 동시에 중국과 같이 보증국으로 남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4자회담과 식량지원을 연계시키고 황장엽의 전쟁위협론을 계기로 북한군의 후방이전과 화학무기 금지협정 가입까지 들고나온 정부의 방침은 북한 무력과 정복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만일 북한에 외국자본이 들어가면 누구와 계약을 맺게 되는지, 임금은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북한의 사회체제를 당정관료와 북한 공장노동자들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관계가 있다고 보는지, 북한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경제 체계의 명아가 보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북한에는 아직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이 형성되려면 상품시장이 보편화되어야 합니다. 북한에는 자본주의의 시장 폭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구조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연합 단계가 되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면 노동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노조가 결성되어 남북의 노동자가 연대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북한의 노동자는 남한의 자본과 결탁되면서 시장폭력에 노출될 것입니다.

다음 지배와 피지배관계에 대한 질문은 곧 북한이 인민 대중중심의 관행이 형성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체사상은 인민중심도 수행의 영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위가 아래를 도와주고, 끌어주어야 한다는 논리, 즉 엘리트가 중심이 되어 민중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인민대중중심주의입니다. 실제 대중이 엘리트 앞에서 함부로 의견개진을 못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료주의 퇴치를 얘기하지만 실제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적인 경제여부에 관해서는 텃밭을 경작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등 어느 정도는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차 확대되는데 앞으로 후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객관적인 조건속에서 시장경제의 도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 지정토론 / 북녘동포돕기와 통일운동의 과제

노중선 / 통일문제 자료실 대표

### 각계각층의 활발한 북녘동포돕기 활동

지난해부터 민간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북녘동포돕기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현재 재야, 종교, 시민, 기타 사회단체 등 무려 200여개 단체(한겨레 97.5.23)들이 북녘동포 식량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각 교도소에 복역중인 양심수들을 비롯하여 각 대학의 동분회, 각종 취미 오락 동아리들,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에서부터 80세 노인들과 해외 교포들까지 다수의 민족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 방법도 개별적 헌금이나 가두모금 이외에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 수익금, 점심한끼 굶기를 통한 모금, 현장 조합원들의 성금, 북녘동포돕기 시낭송 특별공연 등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계층의 여러 단체에서 모아진 금액으로 쌀, 옥수수, 밀가루, 분유 등을 구입해서 국제기구들이나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5월 19일까지의 기간 동안 북한에 전달된 지원식량의 규모는 세계 식량기구, 국제적십자연맹, 유엔 아동기

금,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등에서 곡물(쌀, 옥수수, 콩, 밀가루, 감자 등) 4만9천5백톤, 가공식품(국수, 생선조림, 식용유, 분유 등) 7천톤, 기타(영양강화 식품 등) 50톤이 공급되었고, 이 중에는 민간차원의 각 북녘동포돕기 단체들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의뢰한 옥수수 1천3백80톤, 밀가루 7백40톤, 감자 1천9백톤, 분유 10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아 97.5.28)

### 북녘동포돕기 활동은 민족화해를 촉진하는 계기

이와 같이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북녘동포돕기 단체들은 대체로 그 활동목적은 "오늘날 북한동포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실상에 대해 함께 아파하며 사상과 이념, 정권 등 모든 것을 초월하여 순수한 인간애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동포를 도와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녘동포돕기 활동들은 그 성격에 있어서 '수혜민 돕기'나 '불우이웃돕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

다. 그 결과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연의에 비해서 민족화해와 신뢰회복문제는 지극히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분단체제의 극복을 향한 그 어떤 계기로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분단 상황하의 우리는 통일을 갈망하는 민족구성원 모두의 염원을 반영하여 그 모든 북한관련 문제는 평화적 통일 촉진 문제가 전제로 되어야만 합니다. 북녘동포돕기 활동이 민족 화해를 촉진하는 계기로 되지 못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구호 식량을 전달하는 성격의 것만 이라면 그것은 통일운동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녘동포돕기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첫째, 북녘동포돕기 활동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불우이웃돕기나 재해동포들에 대한 구호식량의 지원이 아니라 분단체제의 극복을 전인할 남북민중의 새로운 연대를 향한 아주 소중한 기회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면한 민족적 불행은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민족통일 촉진운동의 차원에서 북녘동포돕기 활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북한이 식량난으로 말미암아 정치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북한체제 내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남과 북의 우리 민족 전체에게 걸치워지는 민족적 사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동북아평화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국제적 평화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식량난은 3년간 연속된

수해의 탓도 있지만 남한과 미국의 대북경제봉쇄 정책과 남북 대치상황하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되고 있는 것에서도 북한의 식량난이 북한체제내부 문제에 의해서만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의 대외적인 문제들에서 비롯된 조건들의 해결 없이 식량난의 본질적 해결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 문제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민족화해와 평화체제 구축은 통일운동의 과제

이와 같이 북한의 식량난으로 말미암아 심화된 한반도 정세의 심각성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와 같은 대결적 관계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어떤 형태로든 평화적 해결방도를 강구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 황장익의 전쟁위협성 발언, 휴전선 교전사건 등은 '새로운 남북 및 북미관계 설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정세를 반영하듯 휴전선 교전사건 직후 미국무성 대변인도 "휴전선 교전과 같은 사건의 해법은 평화협정 뿐"이라고 밝힌 것은(한겨레 97. 7. 18)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매우 시사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민족화해'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통일운동 진영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실천해야 할 당연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1974년 3월 북한 측에서 미국 측에 '조미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바 있었지만 당시의 냉전 상황하에서는 발전적으로 진전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냉전과 화해가 혼재하고 있는 오늘의 시점은 다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평화적 통일은 우리의 남북 민족구성원 모두의 더 미룰 수 없는 민족생존과 번영의 문제라는 점, 또 각각 경제적 위기 와 '식량난'이라는 곤경에 처해 있는 남과 북의 당국이 그 같은 난관들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군사비 절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서 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평화협정'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들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더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족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우선 남과 북의 양당국은 군사비로 투입되고 있는 막대한 금액의 국가예산이 절약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1인당 GNP(남 1만5백48달러, 북 9백10달러)에서 11.6배나 높은 남한과 맞서 경쟁적으로 지출해야 할 군사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식량난은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남한의 경우도 1997년 국방예산(14조3천5백억원)은 전체 예산의 2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후대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평화통일 3대 원칙 등에 입각해서 후대들이 보다 더 좋은 사회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 절대적인 액수를 절감할 수 있다면 그 같은 거액은 교육, 의료, 공예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을 위해 전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사실들을 모두 감안할 때 오늘의 이 시점에서 통일운동의 방향은 민족화해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북녘동포들이 활동도 그같은 바탕 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통일방안에 대해 여러 통일운동 주체들에서 잇달리고 있고, 통일 후의 체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열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답변** 연방제나 아니나, 통일 후의 체제가 어떠한가 하는가 문제들은 미래의 문제이지 현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통일준비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제의 문제를 보자면 분단된 지 무려 50년입니다. 분단이전의 상태로 가자고 해도 최소 50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후대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평화통일 3대 원칙 등에 입각해서 후대들이 보다 더 좋은 사회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방제 문제도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중요한 과제는 남북간의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을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제문제만 고민하면서 분열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많은 사람들의 의문은 현시기에 통일 운동하는 것이 정부를 도와주는 것, 곧 흡수통일하자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고, 이것이 또한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분열의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실제 현재시기에 통일운동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흡수통일 정책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굶는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은 진실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이 수제민 돕기, 풀우동이웃돕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운동권 분열 문제와 노동운동과 통일과의 관계의 문제도 현실에서 풀어야 합니다. 분열의 문제도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따져보면 심각한 것도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의 신간회 분열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분단 50년 과정을 보면 주로 통일논의가 활성화될 때 분열현상 나타납니다. 시대적으로 임혹한 시기에서는 분열이 될 여지도 없습니다. 요즘의 분열상황도 통일논의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원칙이 어긋나는 사람과 공학적으로 짜맞추고 합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북녘동포돕기 활동이 활발하게 실천되고 있는 현 시기에 원칙을 서로 제기하면서, 그런 실천의 과정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튼튼해 질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과 통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임금투쟁하고 있는데 교육해도 잘 안됩니다. 목적의식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민주노총의 조합원들도 성금을 많이 내고 북녘동포돕기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통일운동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제기하게 되면 노동운동이 통일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